

이재명, 당대표 사퇴...대선 레이스 속도

이재명 “위대한 국민과 함께 역경 이겨낼 것”
 이르면 오늘 출마 선언할 듯...박찬대 대행 체제
 비명계도 김두관 이어 김동연 인천공항서 출사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선 경선 출마를 희망하는 인사는 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당초 민주당 당헌상 대선 출마를 위한 당직 사퇴 시한은 대선일 기준 1년 전이지만 대통령 궐위 등 비상 상황에서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 조정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당대표 일을 한 지가 3년 가까이 되는데 나름대로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 드린다”며 “아쉽거나 후회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 같다.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성과들도 꽤 낸 것 같다. 당의 문화도 많이 바뀐 것 같다”며 “당원들이 당의 중심이 된 진정한 민주적 정당이 돼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조만간 대선에 출마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한 뒤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군과 경찰이

철수한 후에도 절도나 폭력 사건이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열릴까 이어졌다. 그제 국민의 힘이라고 믿는다”며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도 국민들이 과거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로 빠르게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 저도 그 역경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선 캠프 인선을 마무리한 뒤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 캠프는 계파색이 얹은 인사들로 꾸러질 전망이다. 선거대책위원회에는 5선 윤호중 의원이, 총괄본부장에는 3선 강훈식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병도·박수현 의원 등도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선언문에는 이 대표가 강조해 왔던 ‘민생 우선’, ‘회복과 성장’ 등의 기조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물밑에서 움직여온 이 대표의 대선 싱크탱크인 ‘성장파 통합’도 16일 뜻을 올린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낸 때부터 인연이 있는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

과학부 교수가 상임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 대표의 사퇴를 기점으로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한다. 경선룰(규칙) 설계를 위한 특별당규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경선 체제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당규준비위원회에는 4선의 이춘석 의원, 선거위원장은 4선의 박병계 의원을 앉혔다.

비명(비이재명)계 대선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뉴스



박수 받으며 대표직 떠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표직 사퇴 후 박찬대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국회를 나서며 박수를 받고 있다.

명태균·김영선 보석석방
 “증거인멸하라는 것이냐”

진보당 경남도당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성명에서 “내란 수괴(우두머리)가 구속 취소돼 감옥에서 빠져나와 거리를 돌아다녀니 이제는 윤석열과 김진희의 공천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보석으로 감옥을 탈출하게 됐다”며 “검찰이 나서서 사건을 덮으려 애쓰더니 이제는 아예 직접 나가서 증거를 인멸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보석 결정은 더욱 엄밀한 수사가 필요한 이 시점에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판결이다. 사법부는 내란수괴의 구속취소부터 이번 보석 허가까지 얼마나 지난 윤석열 정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냐”며 “얼마나 깊숙이 연관돼 있기에 탄핵 이후로도 이런 짓을 하는 것인지 명태균·김영선 보석 결정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에 들어서자 일부러 명태균 수사를 늦추는 것이냐”며 “홍준표, 오세훈, 나경원 등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후보들 중 명태균 게이트에 연관되지 않은 사람을 찾기 위해 힘들 정도인데 명태균 수사를 늦춰 대선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덜 미치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충분히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 이상 사건을 맡겨놔야 이들은 사건을 덮고 축소시키려 애쓸 뿐 공정하고 독립적인 특검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지금껏 명태균 게이트를 조사할 적기”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되고 내란 세력들의 범죄사실을 밝혀내고 처벌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지금 바로 명태균 게이트를 조사하기 위한 특검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탄핵정국 서민 아우성인데’...584명 휴가 떠난 광주 동구

임택 구청장 7박9일 유럽 출장 떠나자 줄줄이 ‘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 하루 전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장기간 해외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가운데 부구청장을 비롯한 대다수 공무원들이 잇따라 휴가를 간 것으로 드러났다. 혼란한 정국 속에 지역 민생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동구 콘트롤타워가 자리를 비워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

9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임택 구청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하루 전인 지난 3일 스위스로 출국, 11일까지 7박9일간 해외출장을 떠났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가 주최한 회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임 구청장과 보건소장, 담당 과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일정은 스위스 제네바 세계

보건기구(WHO) 본부를 방문해 도시 건강분야 활동과 주요 성과를 소개, 이후 프랑스 리옹에서 WHO 아카데미와 워크숍을 참여했다.

동구 측은 KHCP 의장도시로서 임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임 구청장은 현지에서 직접 KHCP 방문목적 소개와 주요 활동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구청장이 장기간 해외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구정을 책임져야 할 부구청장도 휴가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동하 부구청장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2일간 개인적인 일정 등을 사유로 연가를 사용했다.

구청장이 장기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비롯해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잇따라 휴가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동구 연가 등 사용 현황을 보면 임

구청장이 출장을 떠난 지난 3일부터 9일 사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40명이 연가를 사용하는 등 5일간 연인원 총 584명의 직원들이 휴가를 떠났다. 동구청 전체 공직자는 743명이다.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인 3일 116명, 탄핵 심판 당일인 4일에는 157명이 휴가를 썼고, 7일 84명, 8일 75명, 9일 68명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일의 경우 무려 95명이 증가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구청장이라는 수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남아 있는 공직자들은 행정과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더 신경쓰고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상급자가 자리를 비우자 기다렸다는 듯 휴가를 가는 모습은 자칫 행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기 기자

우원식 “정국 혼란...대선 후 개헌 논의” “국힘이 주장하는 국회 권한 축소 합의 불가능”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철회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헌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6일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점을 문제 삼으며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제안에 섰었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현 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 향후 다시 한번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선 동시 개헌을 제안한 것은, 지난 30년 동안 반복한 개헌 시도와 무산의 공허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며 “대선 전이 대통령 임기를 정하는 4년 중임제를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뉴스

‘尹 파면’ 전후 5·18 사적지 방문객 늘어

탄핵 정국서 1년 전 대비 2만여 명 증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전후 광주·주지역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를 찾는 방문객의 발걸음이 늘었다.

9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에 따르면 12·3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해 12월부터 탄핵 정국이 이어진 올해 3월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5·18사적지 4호) 내 5·18기록관과 5·18사적지 28호 전 입빌딩245의 계엄군 헬기사격 현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 수는 4만7465명을 기록했다.

1년 전 동기(2023년 12월~2024년 3월·누적 2만9848명) 집계를 따른 방문객 수보다도 2만여 명이 많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12월 1만3582명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1월 1만1498명, 2월 1만113명, 3월 1만2272명까지 매달 1만명 이상 방문

객 수가 집계되고 있다. 이따에도 지난해 7월까지 2513명이 해당 사적지를 찾았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해제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시민들의 발걸음이 부쩍 늘었다.

지난해 12월3일 이전까지 하루 100~300명대 방문객 수를 기록했던 기록관 등 사적지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첫 주말인 같은달 7일 731명이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평일 꾸준히 300~700명대 방문객 수를 기록했다. 주말에는 800~1000여 명을 기록하는 날도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지정한 지난 1일에는 380명이 기록관 등을 방문, 파면 당일인 4일에는 293명이 찾았다가 첫 주말인 5일 615명이 집계됐다.

마은혁 “균형 있는 시각으로 업무 수행 할 것”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공식 취임했다.

마 재판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취임식에서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일하게 되어 과분한 영광”이라며 “임기 동안 우리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 함께 지켜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불철주야로 노력해 저의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우려하시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



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배려를 바탕으로 해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다”며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고 신속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회 토론회 불참 민주당 유감...개혁 뒤틀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해온 광주지역 시민단체 일동이 시민단체와 야당이 주최하는 국회 토론회 불참을 통보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규탄 성명을 냈다.

윤석열정권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비상행동)은 9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비상행동과 야 6당이 공동 개최하는 국회토론회에 불참을 통보한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비상행동은 내란 세력에 맞서 투쟁해왔던 야 6당을 초청,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민주

당의 토론회 불참은 광주시민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근 ‘내란 청산이 먼저다’는 논리로 개헌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 분출을 실질적으로 막고 있다”며 “민주당은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개혁 요구를 기적적인 단계를 밟아가며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세력 청산과 광주 시민의 사회대개혁 열망을 논의하는 일이 선후의 문제인가, 국민주권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김도기 기자